지방자치단체 u-City사업의 효율적 추진전략

Ⅰ. 문제제기

Ⅱ. u-City 의 개념

Ⅲ. u-City 추진현황

Ⅳ. 쟁점사항

Ⅴ.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 u-City사업의 효율적 추진전략

Ⅰ 문제제기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화를 위한 여러 구상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 · 실행되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의 예를 보아도 정부 주도의 초고속망 구축 정책은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초고속망접근비율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올렸음
  -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는데 수많은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어 정부업무 전반에 IT기술이 도입되는 양적인 확대는 이루었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외화내빈의 전자정부라는 비판도 있어 왔음

- 최근에는 미국, EU, 일본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을 민관 협력 하에 진행시키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유비쿼터스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지만, 그 범위나 강조점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연구자 및 민간업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즉, 유비쿼터스 기술의 응용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대규모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이 지향하는 미래의 화려함 이면에는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함
  - 전자정부 사업 이후의 차세대 성장 원동력으로 분류되는 u-City 사업추진의 노력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러한 정보화사업은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실패 또는 위험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성공적인 사업은 기술의 요소와 더불어 자원관리와 조직운영의 문제 등의 정책적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

Ⅱ u-City의 개념

u-City 의 개념

- 유비쿼터스의 원천은 인간이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 고 생각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음
  - 창세기에 나오는 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만물을 창조하며, 바로 유비쿼터스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유비쿼터스의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의 창시자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있는 특수 연구집단인 PARC(Palo Alto Research Center)에 소속되어 있는 마크 와이저(Mark Weiser)임
  - 마크 와이저는 1988년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을 제안하였고, 1991년에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라는 논문으로 21세기의 컴퓨터 환경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며,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글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음
  - 이 글에서 "가장 심오한 기술은 사라지는 것(The most profound technologies are those that disappear)' 이라고 예고하면서 비가시성(invisibility)을 강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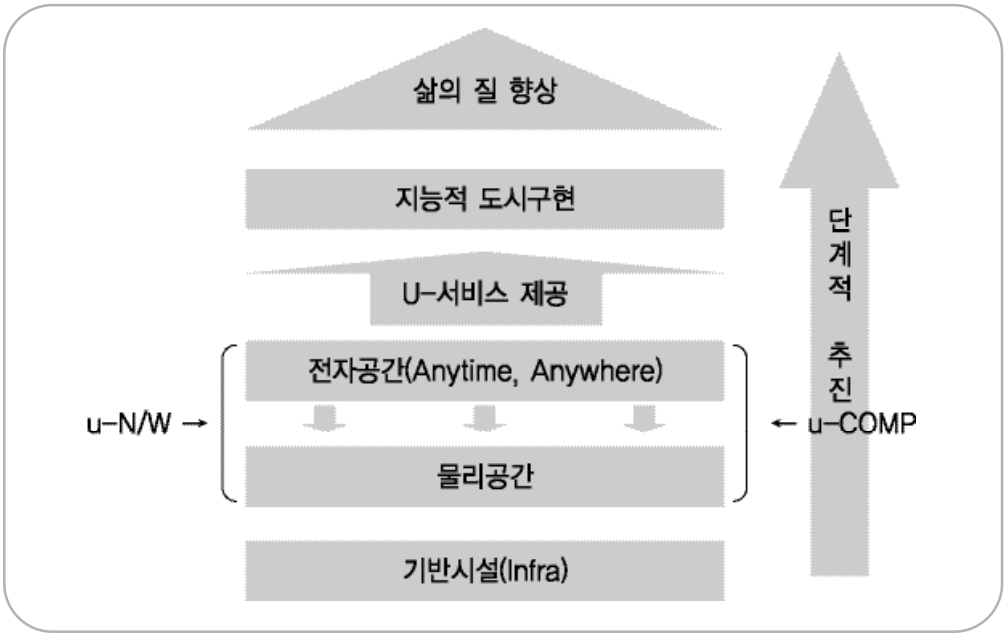
- '유비쿼터스' 라는 개념의 구체화는 1984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토쿄대학교의 컴퓨터 공학부 교수인 사카무라 켄(坂村 健) 교수의 TRON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음
  - TRON(The Real-time Operating system Nucleus, 실시간 운영체계)프로젝트는 모든 사물에 소형 칩을 내장하여 생활공간에 있는 가구, 기기들이 지능을 갖게 되어 어디에나 존재하는 컴퓨터(Everywhere Computer)환경을 만드는 것임
  - 당시 일본은 전자 · 기계 · 자동차 분야에서 50-60년대의 대량생산체제에 안주해 있던 미국을 앞서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주재한 사카무라 켄 교수는 컴퓨터 설계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보겠다는 야심 속에, 세계 최초로 '어디서나 컴퓨터(computing everywhere)'라는 표어를 내걸고, PC가 TV, 휴대폰, 자동차 등 모든 기기에 부속되어 사용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 사회를 구상하였음

- 결론적으로 세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보화를 한단계 고도화 시킴으로써 '유비쿼터스' 라는 개념의 구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발전을 꾀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추세를 통해 u-Cit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연구의 개념을 보면, u-City의 목적은 인간 삶의 제고, 주민편의, 지능적인 도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u-City의 개념정의를 하고자 함
  - u-City는 궁극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u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제고와 지능적인 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 공간상에 전자공간을 접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IT정보기술의 기반 하에 네트워크를 연계시킨 지능형 도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자 함

〈그림 1〉 u-City개념의 도식화



Ⅲ u-City 추진현황

국내 자치단체 현황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u-City 사업현황을 보면, 2006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정보화전략수립(UISP: Ubiquitous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을 끝냈거나, 다음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는 14개 도시가 있으며, 'u-City'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도시는 파주, 동탄, 용인 흥덕,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 광교,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7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나머지 7개 도시는 ' u'를 도시명칭 앞에 붙여놓고 있으며, 추진 도시들은 산업클러스터, 혁신도시 등과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음

〈표 1〉 u-City 특화산업 추진현황 분석

u-City	특화산업
u-제주	관광산업
u-송도신도시	IT · BT · NT 산업클러스터
u-부산	해양조선, 국제자유도시
u-전주	영상산업, 기술클러스터
u-광주	문화산업
상암(DMC)	모바일비즈니스 테스트베드
u-광교	BT · NT R&D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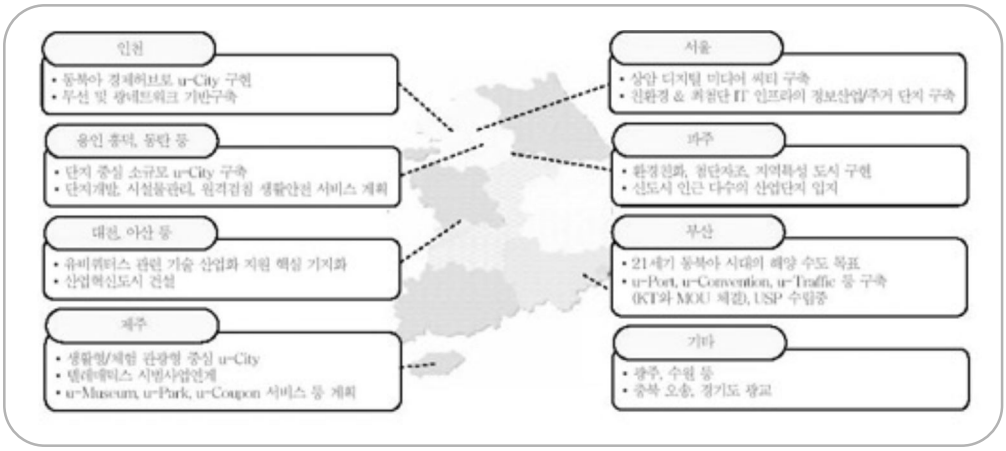
- 신도시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u-City' 사업들을 살펴보면, 30만 이상의 큰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광교,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 3개의 도시는 특화사업, 환경,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IT인프라 구성부터 진행되는 최첨단 정보화도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짧게는 7년에서 30년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 중 파주, 동탄, 용인 흥덕은 타운 정도가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 생활서비스 중심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기존의 도시로는 부산을 포함한 그 외 도시는 신도시 개발에 u-City를 접목하는 접근 방식과는 달리 기존에 개발된 도시에 투자된 인프라 부분에서 효율성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u-City'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의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시관리와 생활 그리고 대 시민 서비스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u-City사업이 내걸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 시설물의 지능화 및 통합적인 관리를 기획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내걸고 있음
  - 둘째, 도시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 컨버전스(conversion)를 이루어 물리적, 전자적인 공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그림 2〉 국내 u-City 추진현황의 도식화



- 각 지방자치단체는 u-City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산(직접투자총액: 8,500억~9,600억원), 송도신도시를 포함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기반조성비: 14조 7,610억원)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계획수립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정된 재원을 통해 u-City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u-City의 종합적인 서비스 영역을 확인한 후, 도시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영역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외동향

- 선진외국의 경우 IT산업에 기반을 두고 시민, 기업, 정부의 편리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는 도시단위의 무선 광대역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임

-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중장기 로드맵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각 사업들이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설계해 나가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음
  - 즉,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실증실험들의 기반위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음

- 유럽의 u-city는 민관합자회사에 의해 개발 · 운영되고 있음
  - 기존도시와의 연계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화를 가꾸고 산업으로 연계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건물마다 예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토탈 디자인의 도시시설물 등이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음

- 미국의 u-City 사례는 1차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의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값싸고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적으로는 이러한 인프라와 사용자 기반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주도로 시 전체를 단일 무선 인터넷(Wi-Fi)망으로 묶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사례는 궁극적으로는 도시 전역을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로 커버할 경우 실시간 연결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응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아시아의 u-City는 정부 주도하에 IT와 미디어 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u-City 도시가 생태환경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조경공간과 친수공간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등 IT와 ECO의 결합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도출되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u-City 추진전략을 위해서는 도시단위의 무선 광대역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방 정부 주도하에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IT와 미디어 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에 주력하며, 각 사업들이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Ⅳ 쟁점사항

- 첫째, 선행연구들을 보면 u-City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음에 따라 추진범위와 방향에 혼란을 겪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술 개발수준도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u-City적용기술을 표준통합하여 부가서비스 시장확대에 주력해야 함을 논의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u-City관련 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표준화 작업의 지연은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u-City조성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해야 하는 중소기업 성장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음
  -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고려해야 하는데 신도시조성사업은 개발기간이 5-7년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시점에는 적용가능했던 기술이 개발완료 후에는 진부한 기술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 둘째, 재원조달의 문제로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u-City추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의 자치단체 재정형편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의 문제로 귀착됨

- 셋째, 개념의 불명확과 재원조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각 자치단체에서는 차세대 발전원동력으로 u-City추진을 현재 구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현재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넷째, 상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u-City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전담할 조직 그리고 전문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임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u-City사업이 추진될 수는 없는 것임
  - 따라서 관련부처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하며 여기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할 수 있는데 이또한 현재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섯째, 실제 추진에 들어가서는 한번에 추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단계적이면서도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단기적 추진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려 하는 경우는 사업의 추진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기의 u-City추진현황의 기간을 보면 대부분 조기완료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됨
  - 단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른 적용분야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또한 기준이나 방법론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지막으로 u-City추진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정보보안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임

- 결론적 출발점부터 개념의 모호함에 따른 추진의 범위의 문제, 다음으로 추진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역량의 부족, 제도적 지원체계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추진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수요의 파악이 뒷받침에 따른 적용분야의 선정이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음

V 추진전략

- 첫째, u-City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추진범위와 방향에 혼란을 겪는 것을 줄일 수 있음
  - u-City의 개념이 u-정부의 개념 범위에 포함된다고 전제할 때, 기존의 전자정부 개념과의 차별성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모든 기반 및 서비스는 전자정부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 서비스 또한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임
  - 즉, 현재까지 진행된 전자정부 사업들이 일정 수준에 올라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임
  - 현재의 유비쿼터스 기술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음
  - 기술적 활용 차원을 넘어 전략기획의 차원에서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 수단의 연계고리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기술적으로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술 개발 수준도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기술개발의 수준에 맞춘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 할 것임

〈그림 3〉 유비쿼터스 기술발전 방향



- 둘째, u-City추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의 자치단체 재정형편으로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민관협력 방식을 고려해야 함
  - 가령, 부산의 u-City 사업에는 2010년까지 약 8,000억원, 즉 매년 시 가용재원의 1/3에 해당하는 2,0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의가 있음
  -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간과 민간의 영역 구분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형성이 필요함
  - PPP방식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담당자들이 그들의 자원과 정보를 결합해 공동의 목표를 상호조율과 조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공공기반 u-City 서비스영역과 민간제공 서비스의 영역의 구분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시민이 보다 나은 u-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자정부의 추진에서 수요부진에 직면해 있고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음
  - 근본적 원인은 정보화 사업들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서 기인한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기존의 연구는 u-City 제공서비스 영역에 대해 응용가능성이 높다고만 제시하고 있지 왜 그러한 영역의 업무들이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현재로선 모호하다는 점임
  - 아래의 표는 각 자치단체별 제공서비스 영역을 분석한 것으로 일관되게 업무가 선택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2〉 정보화 영역별 u-City사업 분석

구분 \ 핵심사업	행정	산업	생활	도시
u-서울(06-11)	◎	◎	○	×
u-상암(03-07)	○	×	○	◎
-City 대전(05-10)	◎	○	×	○
u-City 충북(05-10)	○	◎	○	×
u-제주(04-06)	×	◎	×	○
u-부산(05-10)	○	○	○	◎
u-광주(05-10)	○	×	○	◎
u-대구(05-11)	○	◎	○	×
u-City 포항(05-10)	◎	○	◎	×
u-전주(05-10)	×	○	○	◎
u-강남(04-07)	◎	×	○	○
u-Happy 수원(05-07)	◎	×	○	○
u-성남(06-10)	◎	×	×	○
u-송도(04-08)	×	◎	○	○
u-화성 동탄지구(03-07)	○	×	○	◎
u-용인 흥덕지구(04-07)	○	×	○	◎
u-파주 운정지구(06-09)	×	×	○	◎
u-광교(03-10)	×	◎	○	○

*참조: ◎ 핵심사업, ○ 부가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넷째, 상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u-City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전담할 조직 그리고 전문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u-City의 조직관리의 전략을 모색을 위해 추진부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u-City전략TF팀 구성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산·학·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u-City전략TF팀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정보화인력의 양적·질적 부족상황에서는 u-City구축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임
  - 초기 구축시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국·실별 업무협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임
  - 다음으로 u-City구축사업 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는데 이는 연계 시스템 간 법·제도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 발생이 예상되므로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산 · 학 · 관 협력시스템의 구축으로 지금까지의 정보화사업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독자적인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 · 학 · 연의 수직적 · 수평적인 긴밀한 연계 협력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별로 명확한 역할구분이 필요함
- 가령, 유 · 무선망 구축의 범위, 건축물의 질적 수준, 공공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업주체별 구체적 역할모델의 제시의 필요성을 제기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재원확보와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다섯째, 실제 추진에 들어가서는 한번에 추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단계적이면서도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함

-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산과 수익성, 기술진화 수준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u-City추진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정보보안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임

- 일본이 'u-Japan전략'을 세우면서 4대 과제중의 하나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자료 회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법률 제38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은 설립이래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인사에게 보급하여 왔습니다. 당 연구원은 유익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회원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자료회원 가입방법

당 연구원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팩스(02-3488-7370)로 전송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자료회원 가입안내)에서 양식을 Down 받아 작성하시고 메일(leeyong@krila.re.kr)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 입니다.(기존 회원은 회비 만 납부)

2.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회 원 구 분		회 비	자 료 구 독 내 용	회 비 납 부 방 법
일반회원	개인회원	30,000원	지방행정연구, KRILA FOCUS, 세미나 · 공청회 초청장 등	○ 지로납부: 지로용지발송(지로번호 7630619) ○ 은행송금: 국민은행 367-01-0044-581 (예금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회원	50,000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100,000원	지방행정연구, 연구보고서, 연구자료집, KRILA FOCUS, 세미나 · 공청회 초청장 등	
	기관회원	150,000원		

3.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혁신기획실 조성사업팀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3 / F. 02-3488-7370 / E. leeyong@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ttp://www.krila.re.kr

「지방행정연구」원고모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관련 전문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지방행정연구」는 1986년 7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관련 분야의 활발한 지식교류를 위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4년 후반기에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연구지 모집분야 : 자치행정, 지방재정 · 세제, 지역정책 · 균형발전

2. 연구지 발간일정 : 연 4회 발간

   — 2007년 3월호(통권 제68호), 2007년 6월호(통권 제69호)

   — 2007년 9월호(통권 제70호), 2007년 12월호(통권 제71호)

3. 논문접수일정 : 연중 수시접수

4. 논문제출방식 : E-mail로 제출 (local@krila.re.kr)

5. 논문작성방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의
   「지방행정연구지 기고안내」 참조

6.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혁신기획실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56 / F. 02-3488-7305 / E. local@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ttp://www.krila.re.kr